



공정과 상생

글 한정화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현재 우리 사회 최대 화두는 공정과 상생이다. 대한민국은 반세기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성공을 거두었고, 특히 수많은 개도국들이 한국을 발전모델로 벤치마킹 하겠다고 몰려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의 평가에서 다소 인색한 것은 공정과 상생에 대한 사회적 체감도가 낮기 때문이다. 공정과 상생이 우리나라가 선진사회로 도약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라는 점에 있어서는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회 구성주체 또는 이해관계자에 따라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가능할까?

지난 10여 년간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문제중 하나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문제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커지고 하도급관계를 둘러싸고 불공정성의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2010년 9월 29일 동반 성장대책을 내놓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동반 성장위원회가 출범했다. 유통법과 상생법을 둘러싸고 논쟁과 대립이 있었으나 여야 합의에 의해 통과되었다. 그 와중에 트위터에서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과 나우콤의 문용식 대표가 이마트 피자를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그 후 롯데마트의 5,000원짜리 '통큰 치킨' 출시와 철수를 둘러싸고 이해관계집단 간에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재벌기업의 유통업체가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대형 슈퍼마켓을 확장하는 행위, 자영업자들의 생계터전인 피자 사업이나 치킨 사업에 진출하는 것이 정당한가, 또 이를 여론이나 정부의 개입에 의해 막는 것이 소비자의 편의 측면에서 합당한가라는 이슈다. 전반적으로 대기업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많지만 상당수는 소비자가 싸게 먹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했다는 반박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롯데마트의 치킨판매에 대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영세 상인 보호차원에서 판매 철회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44.4%이지만 “값싼 치킨을 구매할 수 없어 반대한다”는 의견도 36.5%로 상당수의 반대의견이 존재한다. 이 과정에서 치킨 가격의 거품 논쟁이 발생했고 2월 16일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영세상인들의 권리도 중요하나 치킨을 싸게 먹을 수 있는 소비자의 선택도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치킨 프랜차이즈들의 가격담합에 대한 조사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경제스쿨의 한 논자는 ‘이명박 정부의 동반성장 자체가 좌파적 논리이며 경쟁 촉진과 양립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했다. ‘동반성장이 혁신을 파괴하고 안주와 담합을 유발할 개연성이 높다’라는 취지였다.

치킨 가격의 거품논쟁이 일자 한국프랜차이즈 협회의 조동민 부회장은 비공식적으로 치킨원가를 밝혔다. 닭의 원가는 4,000원이지만 식용유, 파우더, 무, 소스, 콜라, 박스, 임대료, 카드수수료, 배달비 등을 합하면 실제 판매가격은 12,000원이라는 것이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는 거품가격 논쟁으로 소비자의 불신을 받고 매출이 줄자 개구쟁이 소년이 장난으로 던진 돌멩이에 맞아죽은 개구리에 비유하며 롯데마트를 비난하는 광고를 내기도 했다.

왜 이러한 문제가 끊임없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무엇이 올바른 판단인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관계의 문제인가?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나의 신앙 또는 기독교 세계관에 비추어 무엇이 올바른 입장인가?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대형 유통업체가 피자나 치킨 같이 소상공인과의 이해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사업분야에는 처음부터 진출하지 않는 것이 옳다. 대기업은 상생을 저해할 수 있는 사업확장에 대해서는 경쟁과 효율성의 논리만이 아닌 사회적 평판과 공정성이라는 관점에서 사려 깊은 자기검열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는 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우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과 동반성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경쟁이 촉진되면 품질과 효율성이 증진되고 가격이 인하되어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주장은 타당하다. 이러한 논리에 의거해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편익을 저해한다는 견해도 맞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론을 막대한 자본력, 유통망, 계열사를 가진 재벌 대기업과 소상공인간의 경쟁에 적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첫째, 효율성 증가 효과에 비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이



라고 주장하기 어렵다. 이마트의 피자나 롯데마트의 치킨은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미끼 상품일 뿐이고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기 힘들다고 본다. 직접 원가만이 아닌 부차적인 서비스나 장소에 대한 임대료, 인건비 등을 고려할 때 이마트나 롯데마트가 효율성을 높였다고 보기 힘들다. 이들이 대량구매에 의한 원재료 구입가격을 낮추려면 공급자와의 협상에 의한 강압적 가격인하를 시도하게 될 개연성이 높다. 이 경우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중소기업에게 부담이 전가된다.

둘째, 공정성 관점에서 볼 때도 부정적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이 영세 자영업자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분야에 뛰어들어 경쟁을 한다는 것은 사회적 정당성면에서 공감을 얻기 어렵다. 한달에 200~3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영역인 시장에 대기업이 낮은 가격을 무기로 진입한다는 자체가 정당성이 결여된 행위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경제규모에 비해 자영업 의존도가 높고 OECD 국가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자영업은 안정성과 수익성이 저조하고, 피자나 치킨은 그나마 여건이 다소 나은 편에 속할 뿐이다. 1,000마리의 양을 가진 자가 이웃집의 1마리 양을 넘보는 것은 불공정한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1,000마리 가진 사람이 한 마리를 더 가지면 약간의 이익을 얻겠지만 이웃은 모든 것을 잃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셋째, 배려의 원리에도 위배된다. 자본주의 시장경쟁에서 볼 때 배려라는 것이 비현실적인 용어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철학의 시조로 불리는 아담 스미스는 배려(benevolence)를 사회적 공감(sympathy)을 위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보고 있다. 성정은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관행을 중시하고 있다. 희년 때 저당 잡힌 토지를 돌려주도록 하여 삶의 터전을 유지하도록 돕고 있으며, 추수를 할 때 이삭을 남겨 놓아 가난한 사람들이 자존감을 유지하면서 생계를 꾸려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년 전 일가족 6명이 집단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다. 신축 아파트 단지 앞에 슈퍼마켓을 열었는데, 옆에 대형 마트가 들어서게 되자 적자가 발생했다. 그 과정에서 사채를 얻어 쓰게 되었고 사채업자의 협박에 시달리다 일가족 동반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 딸 셋에 아들 하나를 둔 가정으로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지만 비극적 최후를 마치고 말았다. 한 가정의 불행이지만 이러한 일은 현재와 같은 무한 경쟁의 시대에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건으로서 가급적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고 대기업이 경영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옳다.



힘의 불균형에 기반한 제로섬 게임

이마트나 롯데마트의 사례는 대기업의 사회적 이미지나 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롯데마트의 치킨에 비해 이마트의 피자는 비판의 화살을 덜 받고 있어서 안도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는 재벌 가족간 거래로 인한 독점이익의 추구라는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신세계 이마트에 피자를 독점공급하고 있는 조선호텔 베이커리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동생인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45%의 지분을 가진 개인회사로서 거래 공정성면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다.

수많은 계열사를 가진 재벌기업은 부당 내부거래 문제에 대해 법적 감시를 받고 있지만 현실을 보면 삼성 에버랜드를 통한 편법 상속, 현대 자동차의 글로벌 등 법적 제재를 받은 사건만이 아닌 현재 수많은 친인척 계열사로 인한 공정성 시비가 그치지 않고 있다. 특히 위장계열사의 경우 법적인 제재를 가하기 힘들기 때문에 공정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

다. 많은 중소기업인들은 재벌기업의 위장계열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진정한 상생경영은 어렵다고 말한다.

복합 사업구조를 가진 재벌 대기업은 막강한 권력집단이다. 경제적 파워만 아니라 정치적 파워, 사회적 파워, 심지어 문화적 파워까지 발휘하고 있다. 그래서 스스로 절제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권력을 남용하기 쉽고 이는 불공정을 야기하게 된다. 정치적 영향력이나 법을 이용하여 약자를 괴롭히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삼성과 법률 분쟁으로 도산의 위기를 경험한 중소기업 사장은 “삼성에겐 맞으면 빗맞아도 사망”이라는 말을 했다. 대기업의 납품과정에서 불공정 거래로 인해 위기를 겪거나 실패를 경험한 중소기업 사장들의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어서 귀에 못이 박힐 정도다. 재벌 대기업 권력의 사회적 제어가 필요하며, 이는 여론과 적절한 법적 장치를 통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힘의 불균형에 기반한 제로섬 게임을 조장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된다. 혹자는 말한다. 자본주의 사회는 다 그런 것이 아니냐? 약자 편을 드는 것만이 정의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나 약육강식의 논리만이 지배한다면 이는 인간사회가 아닌 정글에 불과하다. 롯데마트는 처음부터 이런 방식의 영업 전략을 택하지 말았어야 했고 빠르게 철수를 결정한 것은 잘했다고 본다. 이마트 피자사업도 재고가 필요하며, 이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대기업들도 수익과 성장만이 아닌 공정과 상생의 기준을 적용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공정한 기회와 여건

건강한 사회란 국민 각자가 괜찮은 직업이나 생업을 바탕으로 스스로 자기 생계를 꾸려가는 기회와 여건이 유지되는 사회다. 실패하는 사람보다 성공하는 사람이 많아야 하며, 건전한 가정경제의 유지는 행복추구의 기본조건이며 사회 안정의 기반이다. 대기업이 제로섬 게임을 하게 되면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혁신을 통해 새로운 고객을 창출하거나 시장 규모를 키우면서 시장에 진입해야 한다. 한정된 규모의 시장을 공정성이 결여된 방법에 의해 탈취해가는 게임 방식에 대해서는 사회적 비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막대한 자본력과 계열사를 거느린 재벌기업이 공정 사회로의 발전을 저해하는 역할을 한다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망각한 행위다. 지난 반세기 동안 대기업이 한국 경제와 사회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것처럼, 앞으로 한국사회의 공정과 상생의 수준을 높여서 바람직한 선진사회를 구축하는데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이다.

* 이 글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본 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